

주제발표 1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인정제의 개선 방향

- 평가대상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

김 중 회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서론

지난 20년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학문분야평가인정제)를 통하여 개별 대학들은 스스로의 모습(자체평가)을 진단하고, 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학문분야평가인정제도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현행 학문분야평가인정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로는 첫째, 평가주기와 평가대상 학문분야의 수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둘째, 학문분야평가 준비기간이 촉박하며, 셋째, 학문분야평가의 성격 변화에 따라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넷째, 평가결과 활용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섯째, 부실한 평가자료를 제시하는 대학과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 등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b:7~9).

현행 학문분야평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선의 대학평가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여기에서는 현재 시행 2차년도인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인정제의 평가대상 학문분야가 적절한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첫째, 1982년 대교협 평가 시행 이후 현행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인정제를 시행하기까지 평가대상 학문분야가 어떻게 선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이미 예고된 5년 주기 평가대상 학문분야 선정의 원칙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년 주기 학문분야 평가인정제 시행 1차년도(2005)와 2차년도(2006)에 제기되고 있는 평가대상 학문분야 관련 쟁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평가대상 학문분야 선정의 변천에 대한 검토

대교협 학문분야평가제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대의 학문영역평가는 1992년에 와서 학과평가인정제로 바뀌었고, 학과평가인정제는 1999년부터 학문분야평가인정제로 변경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a:146-148).

1. 1980년대 평가대상 학문영역의 선정

1982년도부터 시행된 학문영역에 대한 평가는 특정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당시 문교부, 이하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 기간동안의 학문영역별 평가는 대체로 계열별 평가, 프로그램별 평가, 학과별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계열별 평가는 교육부의 학생모집단위 기준에 의한 분류인 6개 대분류와 29개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1982년에는 기초과학계·공학계·특성화 공학계, 1983년에는 사립 공과대학, 1985년에는 인문과학계·사회과학계·이학계·공학계, 1988년에는 사범계·농림학계, 1989년에는 어문학계·약학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계열별 평가를 위주로 하면서 국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특정 프로그램 평가를 병행하였는데, 1983년에는 국민윤리 및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1984년에는 대학 교양교육과 국민윤리 및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1989년에는 교양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과별 평가는 1984년 법학과 평가를 시작으로, 1987년에는 특성학과에 대한 평가, 1990년에는 도서관학과와 간호학과를 평가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a:146).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인 구분이며, 평가수행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구분에 의하여 평가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평가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a:147).

첫째, 평가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평가는 명칭은 '평가'였지만 실제로는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각 대학의 관련 학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에 설치된 관련 학과의 전체적 현황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평가결과도 개별 대학에 대한 결과는 제출되지 않았고, 전체적 현황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둘째, 평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그 결정과정도 대교협과 정부의 임의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2. 1990년대 학과평가인정제의 도입과 평가대상 학문분야 선정

1987년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평가제를 강화하여 대학평가인정제로 전환하자는 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교협과 교육부는 대학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연구조사,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선 학과평가부터 학과평가인정제로 전환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과평가인정제의 시행 초기인 1992년과 1993년에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대교협이 평가대상 학과를 평가실시년도 1년 전에 선정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4년 제5차 대학평가인정위원회(1994. 8. 31)에서는 평가실시년도 2년 전에 평가대상 학과를 선정·발표하는 2년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였다. 학과평가인정제 시행 초기 평가대상 학과의 선정기준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a:148)은 ① 전국 대학 중 10개 대학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 ② 이공학계 학과를 우선으로 하되,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학과, ③ 자격증이 요구되는 학과이다.

이와 같은 학과평가인정제 시행 초기의 평가 대상 학과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1992~1994년도의 3년간은 ①21세기를 지향하여 국가산업 발전을 주도해야 할 학과, ②이학계와 공학계 학과 중 1개 학과씩 2개 학과 실시, ③설치 대학 수가 10개교 이상인 학과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1995~1996년도의 2년간은 ①지난 3년간 6개의 이공계 학과 평가실적 고려, ②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대비하는 대학의 부담 경감, ③다양한 학문분야 및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1996년도 평가대상 학과와의 계열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학과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도별 평가대상 대학은 1992~1994년도에는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학부와 대학원으로 하였고, 1995년도에는 대학원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설치된 지 5년 이상인 학과의 학부와 대학원으로 하였으며, 1996~1997년도에는 학부 졸업생이 있는 학과의 학부와 대학원으로 하였다. 1999년 이후부터는 학부와 대학원 졸업생을 3년 이상 배출한 학과 및 학문분야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김병수, 2004).

평가대상 학과의 선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2년과 1993년에는 단일 학과만을 평가대상 학과로 선정하였으나, 1994년에 생물학과와 화학공학과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되 관련 유사 학과는 각 대학의 희망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단일 학과 평가체제에서 벗어나 학문 계열별 평가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대상 학과의 수를 대폭 늘리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유사 학과 간의 통합을 유도·권장하기 위해서이다.

3. 학문분야평가인정제 전환과 평가대상 학문 분야 선정

1997년 말 국내 외환위기(IMF)로 인해 제 13차 평가인정위원회는 1998년도 평가대상 분야인 경제학과와 사학과에 대한 학과평가를 1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5차 평가인정위원회에서는 동 학과평가를 취소하였다.

1998년도 학과평가인정제가 미 실시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1999년도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을 도입·추진하면서 대교협의 학과평가 사업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1999년도 들어 교육부가 사업추진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학과평가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교협도 1999년도 학과평가를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후 학부제 등의 실시로 학과 단위의 평가가 어려운 관계로 학문분야평가로 전환하고, 대교협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대교협은 평가인정위원회를 통해 평가대상 분야의 선정과 관련한 준거를 ①다수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국가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부터 실시, ②대학의 특성화와 타 학문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영역부터 실시, ③균형 있는 학문발전을 위하여 특정계열이나 영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a:153). 이에 따라,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건축 관련 국제 시장 개방이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는 시점이고, 학문분야평가의 1차년도이므로 학문분야 구분이 비교적 뚜렷한 법학 분야와 건축(공)학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999년도 학문분야평가는 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학부에 한하여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졸업생을 3년 이상 배출한 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과거 학과평가에서는 일반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산업대학도 희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와 재료공학 분야를 평가하였으며,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1년에는 교양교육 분야와 디자인 분야를 평가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3개 분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학, 수학, 토목공학 분야 등을 평가하였다. 2003년에는 문헌정보학, 경제학, 물리학 3개 학문분야를 평가하려 했으나, 해당 학문분야 교수들이 평가편람 및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당해 년도에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상반기에 평가를 시행하였다. 2003년도 학문분야평가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4년에는 별다른 무리 없이 신문방송학, 생물·생명공학, 기계공학 3개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Ⅲ. 5년 주기 평가대상 학문분야와 시행상의 주요 쟁점

1999년부터 다시 시작된 학문분야평가인정제에서는 평가대상 학문분야의 선정이 정부의 평가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당해년도 초에 고지되었다. 즉, 외환위기 이전의 사전 예고제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평가대상 대학들은 평가대상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평가준비를 해야 했고, 평가 당해년도에 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했으며, 평가대상 학문분야가 고지된 후 불과 몇 개월 동안 자체평가연구보고서, 현지방문평가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준비기간 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10여년간 일정한 주기 없이 평가대상 분야가 선정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문분야가 아직 2주기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학문분야평가에 관한 제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2002년 '학문분야평가 종합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2002년 3월). 동 위원회에서는 학문분야평가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학문분야평가 계획을 정리한 『학문분야평가 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3년 문헌정보학, 경제학, 물리학 3개 학문분야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2004년으로 이월되면서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시행방안을 강구한다는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1. 평가대상 학문분야 선정의 기준

평가대상 학문분야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각 학문분야의 균형발전
- 2)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점 육성 대상 학문분야 선정
- 3) 학문발전의 진전에 따라 교육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되는 학문분야 우선 선정
- 4) 대학들에 설치된 학문분야 수 고려
- 5) 특정 학문분야에 있어서 설치대학의 수가 적어도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학문분야 선정
- 6) 학과와 전공의 명칭 중,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학문계통상의 명칭을 변경하여 인접학문 명칭을 결합시켜 복합학문 명칭을 사용하는 학문분야 선정

이상의 일반적인 원칙을 토대로 설정한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 대상 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33).

- 1) 학문분야의 발전 동향 및 국가·사회적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는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는 향후 5년간의 학문분야 평가에서 2번 이상 평가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 2) 5년 주기 년도별 학문분야평가 대상 선정에서는 학문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인문학과 예술·체육 계열을 포함시킨다.
- 3) 학문분야 설치 수가 25개 대학 이상인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설치대학이 25개 미만인 학문분야라 하더라도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며 중점육성이 필요한 학문분야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한다.
- 4) 5년 주기 평가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0개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문분야별 균형발전 차원

에서 <표 1>과 같이 안배한다.

- 5) 평가를 한번도 받지 아니한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계열의 학문분야를 우선 평가대상 학문분야로 한다.
- 6) 평가를 받은 지 오래된 학문분야에 평가대상 선정의 우선순위를 둔다.
- 7) 공학계열 학문분야는 IT, BT, ET, NT, ST계열의 학문분야를 같은 해에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학문분야를 선정함으로써 대학별 평가준비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2. 5년 주기(2005~2009) 평가대상 학문분야

2005~2009년까지 5년간 년도별 평가대상 학문분야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국어국문학, 동양어문학 등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를 받은 지 시간이 비교적 많이 지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문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도록 한다.

2006년에는 학문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양문학, 정치·행정학, 식품영양학, 음악 분야에

<표 1> 평가대상 학문분야 수

학문군	중계열	학문분야	평가대상 수
인문 사회 과학군	인문학	국문학 분야, 서양문학 분야, 동양문학 분야, 역사 분야, 철학 분야	5
	사회과학	사회과학경제학, 경영학, 국제통상학, 언론매체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행정학	8
기초 자연 과학군	자연과학	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4
	농·가정	농학, 식품영양학	2
응용 과학군	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소재·재료공학	10
	의·약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수의학	6
예술 체육학군	예술	디자인, 미술, 음악, 연극·영화	4
	체육	체육	1

〈표 2〉 2005~2009년 5년 주기 평가대상 학문분야

(단위 : %)

계열	2005	2006	2007	2008	2009	
인문학(5)				철학	사학	
	서양문학					
	동양어문학 국어·국문학					
사회과학(8)			경영학 국제통상학	경제학	언론매체학 사회복지학	
		정치·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생물학(생명과학)	
자연과학(4)			수학	물리		
			화학			
농·가정(2)	농학	식품영양학				
					생명공학 기계공학	
공학(10)			화학공학 소재·재료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환경공학		
		전산·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공학				
					의학	
	의·약학(6)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				
예술(4)			연극·영화	디자인	미술	
		음악				
체육(1)	체육					
40개 분야	8개 분야	8개 분야	8개 분야	8개 분야	8개 분야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5),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 시행방안 연구, p. 32.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문 발전의 속도가 빠른 IT계의 공학분야 전산, 컴퓨터 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공학에 대한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비교적 타 학문분야에 비해 평가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간호학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2007년에는 비교적 평가를 받은 지 오래된 학문분야인 경영학, 국제통상학, 수학, 화학, 화학공학, 소재·재료공학, 치의학, 연극·영화 8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2008년에는 학문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학을 포함시키고 2003년 이전에 평가를 실시한 경제학, 물리학, 도목공학, 건축학, 환경공학, 한의학, 디자인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2009년에는 학문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학과 미술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2004년 평가분야인 언론매체학, 생물학, 생명공학, 기계공학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의학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공학계열의 평가학문분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IT, BT, ET, NT 관련 분야를 같은 연도에 평가를 함으로써 국가사회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효율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대학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특성화를 유도한다.

3.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인정제 시행 1차년도인 2005년에는 당초 8개 분야를 평가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사회학, 심리학 분야는 평가가 거부되었다. 국어국문학의 경우는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앞두고 평가가 거부되어 자체평가연구계획을 제출한 96개 대학 중 그 절반에 해당되는 46개 대학에 대해서 평가가 실시되었다.

2005년에 이어 2006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인정제는 학부제에 바탕을 둔 학문분야평가의 틀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학과평가제로 환원해야하느냐, 일부 학문분야의 평가거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계속 유지하느냐, 평가결과의 미활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1) 학문분야평가 틀 유지의 문제

2005년 국어국문학 분야 평가의 경우는 당초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과를 동시에 평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평가편람 및 기준개발 과정에서 두 과의 학문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학문분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문예창작과를 제외하고 국어국문학과만 평가하였다. 동양어문학 분야의 경우도 당초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을 묶어서 평가할 계획이었으나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문분야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두 개 학문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체육학 분야 역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실상 체육학과 무용학을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2005년도 학문분야평가에서 농학 분야는 농학·원예학·축산학의 3개 하위 학문분야를 통합하여 평가함으로써 학문분야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살렸다.

2006년도 평가대상 학문분야 역시 2005년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위 학문분야의 분리 또는 통합에 의한 평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평가대상 학문분야로 음악 분야를 들 수 있다. 여러 음악분과 중 특히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는 서로 다른 장르이고 실습기자재를 달리하기 때문에 분리를 요구할 경우 그 분리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는 2006년도에 평가하게 될 학문분야에서 간호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분야에

서 공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후 학문분야평가에서도 의·약학 계열의 평가대상 학문분야를 제외하면 모든 학문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제이다.

2) 일부 학문분야평가거부 문제

2005년도에 사회학 분야와 심리학 분야의 평가거부에 이어 2006년도 평가대상인 영어영문학 분야와 식품영양학 분야가 평가거부를 표명한 실정이다.

사회학 분야는 한국사회학회의 주도로 평가를 거부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심리학 분야는 평가편람 및 기준개발이 진행되던 중, 한국심리학회 주축으로 현행 대교협 평가인정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형성평가를 요구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었다. 국어국문

학 분야는 2005년 9월 초 주요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및 국어국문학회를 중심으로 평가거부 움직임이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평가대상 대학의 50% 정도가 평가를 거부하였다.

사회학 분야와 심리학 분야 그리고 국어국문학 분야의 평가거부에 대한 주요 입장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금년도 평가대상 학문분야인 영어영문학 분야와 식품영양학 분야의 평가거부의 경우도 그 이유가 사회학 분야와 심리학 분야와 유사하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향후 학문분야평가에서도 인문학계열의 철학 분야와 사학 분야, 그리고 예술계열의 학문 분야 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전체 학문분야평

<표 3> 사회학·심리학·국어국문학 분야의 평가거부에 대한 주요 입장

학문 5분야	평가거부 사유
사회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학회 이사진에서 논의한 결과 당초 정한대로 계속 평가를 거부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을 전달해옴(2005. 4. 1.). - 평가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음. - 등급화, 서열화에 대한 거부감 - 선정이 늦어 제대로 평가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 부족 •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한국사회학회와의 평가 관련 협의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함.
심리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심리학과는 자체성장을 위한 걸음마 단계로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상대비교보다는 현상과악 및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한 정보제공적 피드백 형식의 형성평가가 요구됨. • 심리학과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일률적인 잣대에 의한 대교협의 평가가 진행된다면, 평가준비과정에서 심리학과가 얻는 득보다는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교협 평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2005. 4. 19).
국어국문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편람 및 기준개발이 완료·배포되어 각 대학을 중심으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이 진행되던 중 대교협 제출 기한을 목전에 두고 국어국문학회 및 일부 주요 대학을 주축으로 평가거부 움직임이 확산되어 평가대상 94개 대학 가운데 46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함.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자료

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학문분야평가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다.

3) 학문분야평가 결과 미활용의 문제점

우리나라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는 중복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공학인증원과 의학교육평가위원회가 가세하고 있는 공학과 의학 분야는 3중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분야평가는 그 결과 발표를 통하여 공적인 인증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나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학문분야평가 결과를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의 학문분야평가 결과의 생산적 활용에 대한 이해와 의지 부족(평가철학의 빈곤) 둘째, 대학자치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소극적 평가관행 셋째, 평가결과의 생산적 활용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의 미비 등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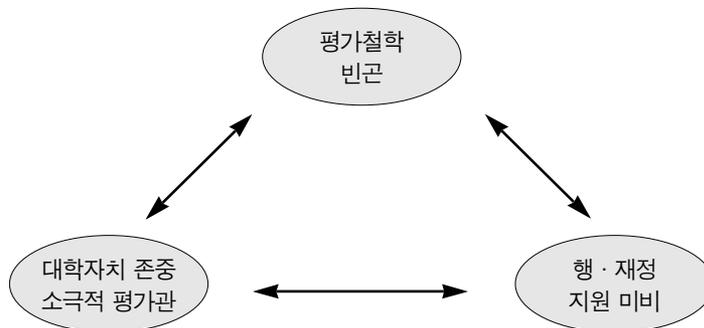
IV. 결론

현실적으로 정부는 대학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준칙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1996년에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운영과 관련해 많은 부분을 자율화로 위임하고 있다.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완화되어 왔으며,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책무성 및 경쟁력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여건과 내용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학문분야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로써 자율적 질 관리 기제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평가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의 5년 주기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평가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 주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정량적 정성평가항목을 개발하는 등의 제도와 도구 개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문분야에서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학문분야평가 위기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분야평가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



[그림 1] 학문분야평가 결과 미활용의 악순환

서 학문분야평가의 본래의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문분야평가의 중요한 목적은 평가대상 학문분야의 발전을 유도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 이유는 학문분야의 발전이 없이 국가발전이나 관련 산업 및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량지표는 자료를 표준화하여 이에 대한 D/B구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대학의 평가준비 업무를 덜어주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대상 대학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자체평가보고서에는 정량 및 정성 평가항목이 40여 개에 달하며, 그 중에서 정량적 평가항목은 혼합형까지 합하여 25~27개 항목이나 된다. 대부분의 정량지표가 평가시점으로부터 3~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므로 이를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방대한 일이다. 또한 현 지방문평가단이 하루의 일정으로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한 업무이다. 따라서 학문분야평가가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면, 가능한 정량지표는 자료를 표준화하여 상시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이를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요지표의 D/B자료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상당한 부분은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적인 자료 표준화 작업만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가 갖추어지면 평가대상 대학들은 평가시점에서 정성항목과 일부의 정량지표에 대한 보고서만 작성하므로 평가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다. 이는 현 지방문평가단의 현지평가 업무량을 줄이는 결과를 수반할 것이며, 전반적인 학문분야평가의 내실화를 기하는 주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학문분야평가인정제의 평가결과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학문분야평가인정제는 대학들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타 대학과 자기 대학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대학들이 평가를 회피할 수 없는 당위론적 명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평가의 결과가 대학이 직면한 문제해결 및 대학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평가는 대학과 그 구성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학문분야평가의 결과가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때, 대학 및 대학구성원들은 대학평가를 부담만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학문분야 평가는 많은 학교들이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는 발표 시점에서 약간의 사회적 관심을 가지는 수준에서 더 이상의 활용실적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문분야에서는 평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평가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결정할 때나, 학술재단과 기업 등에서 연구의뢰나 연구비 지원을 결정할 때, 학문분야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의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중복 평가, 자원의 효율성 낭비, 평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평가편람 및 평가기준의 개발에 반영하여 관련 기업들이 평가결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를 거부하는 일부 계열의 학문분야는 과감하게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 학문분야로 선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지를 표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학문분야가 아직 평가를 받을 만큼의 학문적 발전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부 학문분야처럼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일부 대학 해당 학문분야 교수들이 담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평가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문분야의 본래의 목적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타 학문분야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소지가 있는 학문분야는 현행의 5년 주기 평가대상 학문분야에서 사전에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대학평가 사업이 대학의 질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외국의 대학들이 한국의 대학평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학평가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대학평가가 지니는 경쟁 평가의 본질상, 대학평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과 반발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질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학의 서열주의를 타파하고 대학 간 상호 경쟁을 통한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좋고’, ‘싫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볼 때, 대학종합평가는 물론이고, 학문분야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는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급격한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급격한 사회문화 변동과정에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가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여건과 방법 및 운영의 효율성을 진단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실제적 논리의 개발과 학문적 체계화가 필요하다.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와 대학 발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때, 그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4). 2004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1999).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대학평가지표 체계화에 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99정책연구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0). 대학평가국제비교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년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b). 학문분야평가 발전 종합계획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4). 국가발전과 대학의 역할. 2004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5).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 시행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지식강국건설을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제7차 KRIVET정책포럼 자료집.